

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1년 사회

“무너진 복지, 거꾸로 사회”

‘Kwarosa’ 과로사 국가

노동

- 2천만 근로자의 삶 대통령 지지율에 좌지우지, 무원칙·무책임·무관심 정부
 - 윤석열 대통령, “최대 주69시간 근로 가능”에서 지지율 17%(18~29세. 한국갤럽. '23.3.17)로 떨어지자, “주60시간 이상은 무리”
-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시간은 ‘주36.7시간*’, 거꾸로 가는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
 - 법정 최대 근로시간: '53년 주60시간 → '89년 주64시간 → '03년 주68시간 → '18년 주52시간 → **'23년 주69시간**
 - * 변수정 외. 2022년 전국 일-생활 균형 실태조사: 한국보건사회연구원.
- 주60시간 이상 근무시 뇌심혈관질병의 업무 관련성 승인율 91.7%
 - '22년 뇌심혈관질병의 업무 관련성 승인율**(신청건수): 주52시간 미만 15.8%(1,302건), 주52이상~60시간 미만 76.6%(256건), 주60시간 이상 91.7%(254건) **근로복지공단 '23.3.31

「근로기준법」의 법정 근로시간 변화

1953년 「근로기준법」	법정 근로시간 주48시간 최대 주 60시간
1989년 개정 「근로기준법」	법정 근로시간 주44시간 최대 주 64시간
2003년 개정 「근로기준법」 (주5일 근무제)	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 최대 주 68시간
2018년 개정 「근로기준법」 (주52시간 근무제)	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 최대 주 52시간

임금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추세***



***OECD (<http://stats.oecd.org/>)

청년 일자리, 양과 질 모두 무너져가는 데 정부는 무대책

고용

- 고용 한파 속 청년 고용 하락 추세, 고용률 하락, 실업률 감소폭 축소
 - 고용률 증감: ('22.3.)▲3.0%p (46.3%) → ('23.3.)▼0.1%p (46.2%)
 - 실업률 증감: ('22.3.)▼2.8%p (7.2%) → ('23.3.)▼0.1%p (7.1%)
-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줄고 임시·일용직 근로자만 증가, 악화되는 청년 고용의 질*
 -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감: ('22.3.)▲1.0%p(63.5%) → ('23.3.)▲0.3%p (63.8%)
 - 임시직 근로자 비중 증감: ('22.3.)▼0.9%p(26.4%) → ('23.3.)▲0.9%p (27.3%)
 - 일용직 근로자 비중 증감: ('22.3.)▼0.7%p(3.2%) → ('23.3.)▲0.3%p (3.5%)

*전체 청년(15-29세) 취업자 중 비중

• 거꾸로 가는 청년 고용 정책

- 양질의 청년 일자리, 공공기관 채용 축소: ('22) 2만5542명 → ('23) 2만2000명, 최근 6년 만에 최소
-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사,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대폭 삭감 ('22) 13,099억원 → ('23) 6,403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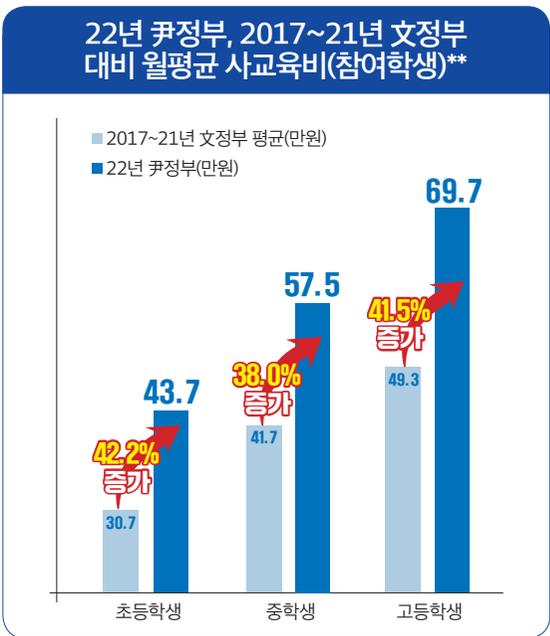


**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

붕괴된 공교육 사교육비 26조원, 역대 정부 최고액 돌파

교육

- 윤석열 정부 1년차 사교육비 총액 26조원. 모든 학년에서 사교육비, 사교육 참여율, 참여시간 일제히 증가
 - 文정부 5년 평균 사교육비 총액은 20.4조원으로 尹정부 들어 무려 27.5% (▲5.6조원)폭증
 - 사교육비 총액 전년대비 ▲2.6조원(10.8%) 증가로 사교육 대폭발 발생
 -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43.7만원, 중학생 57.5만원, 고등학생 69.7만원으로 文정부 5년 대비 초 42.2%(▲13만원), 중 38.0%(▲15.8만원), 고 41.5%(▲20.4만원) 폭증하여 역대 정부 사상 최고
 - “교육도 경쟁시장 구도가 되어야 한다”며 사실상 사교육시장 부흥을 펼쳐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무능으로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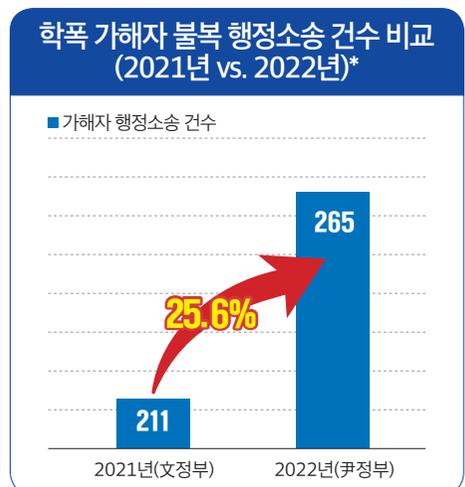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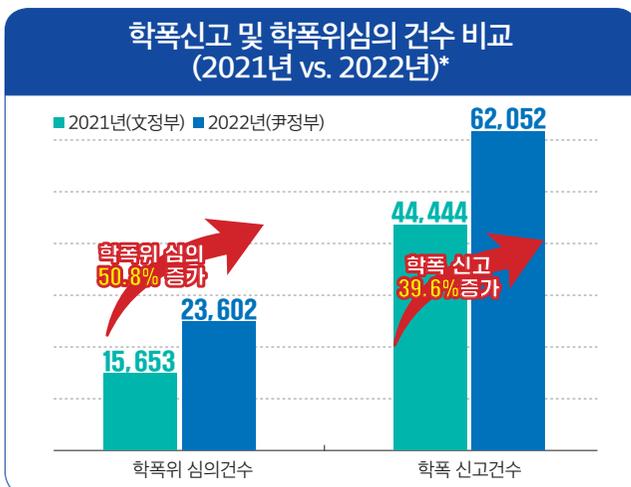


*통계청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(2023.3.7.)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.

**통계청 2017~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(2023.3.7.)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.

학교폭력 폭증, 정순신 따라하는 학폭불복 행정소송도 폭증

- 2021년 대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학폭 신고 건수 39.6%, 학폭위 심의 건수 50.8% 폭증
 - 학폭 사건 급증으로 4주 이내 심의지침 미준수가 30%. 서울은 무려 70.9%의 사건이 심의지연으로 피해학생과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
 - 윤석열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 5,000명 총원해 학교 2곳당 1명씩 배치하기로 공약했으나, 임기 시작 후 오히려 100여명 감소
 - 2023년 경찰청 운영계획에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증원 예산은 빠짐
 -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업무는 전문성 및 인력부족 상태로 총체적 난국
- 정순신 사건같은 학폭 행정소송도 폭발적으로 증가
 - 가해자의 법적대응은 유전무죄, 법률가들의 틈새시장으로 변모. 윤석열 정부가 학폭 법률시장을 육성하고 있는 꼴
 - 학폭 가해자 불복조치로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2022년 265건으로, 전년도에 비해 25.6% 폭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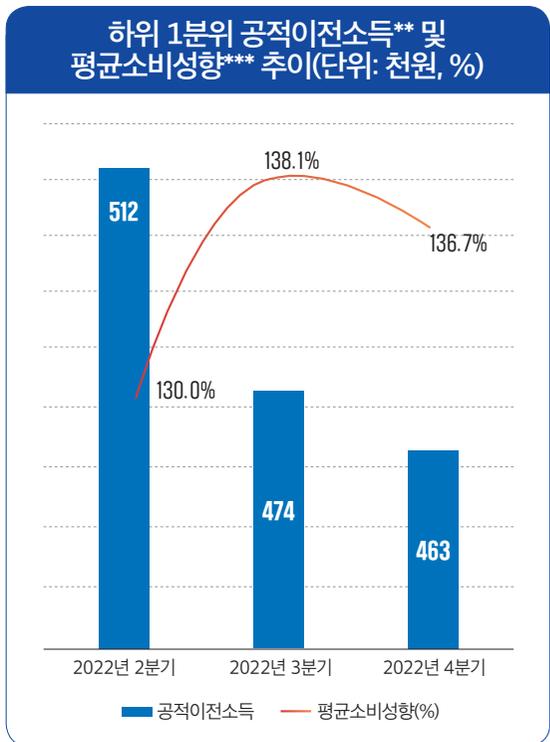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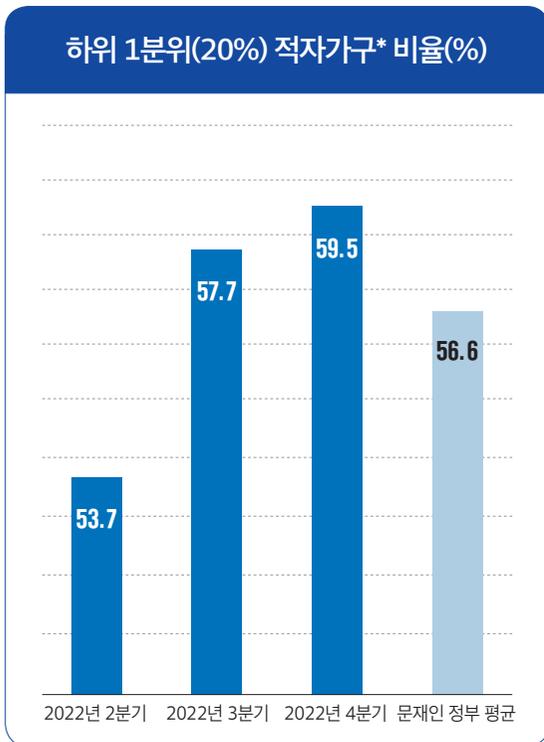


*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 발표자료(2023.4.14.)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.

약자복지? 저소득층 적자가구 지속적 증가

복지

- 윤석열 집권이후 하위 1분위(20%) 적자가구비율 증가(통계청 가계동향조사)
 - 2022년 2분기 53.7% → 2022년 4분기 59.5%(2019~2021년 평균 56.6%)
- 공적이전소득은 오히려 감소
 - 2022년 2분기 512천원 → 463천원
- 고물가로 증가한 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이 따라가지 못해 저소득층 생활고 가중
 - 2022년 2분기 평균소비성향 130% → 2022년 4분기 137%



가계동향조사 2022년 각 분기.

*처분가능소득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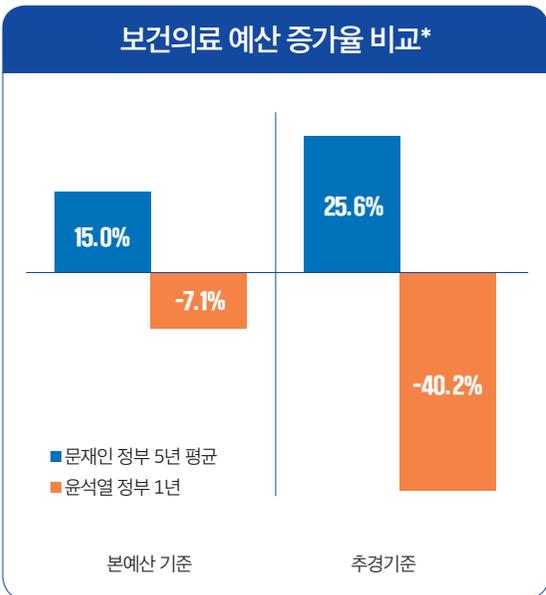
**공적연금, 기초연금, 사회수혜금, 연말정산 환급금

***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

공공의료·보장성 나몰라라, 의료산업에만 관심있는 윤석열 정부

보건의료

- 2023년 보건의료예산 전년대비 7.1%(3,485억원) 삭감(추경대비 13.2% 삭감, 3조593억원)
 - 공공병상비율인구 1천명당 1.2개. OECD 28개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(2021)
 -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, 공공의료 인력 양성,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예산 삭감하고, 정보화·마이데이터·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 등은 순증
 - 감염병 대응체계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 예산 49.7% 삭감(본예산 대비)
- 가짜건강보험 재정안정론
 - 문재인케어 폐기 이유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근거로 들었으나, 2022년 단기수지 3조6,291억 원 흑자. 누적적립금은 2022년 23조8,701억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2018년보다 3조2,746억원 순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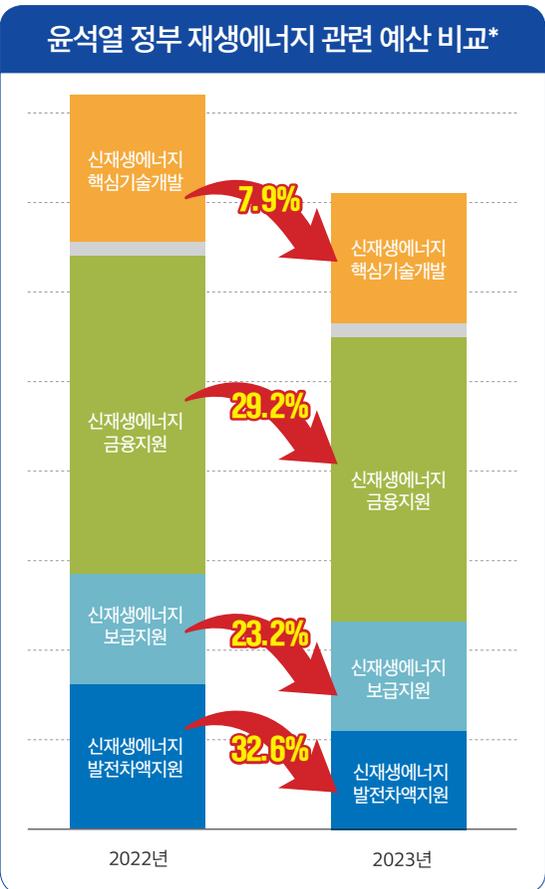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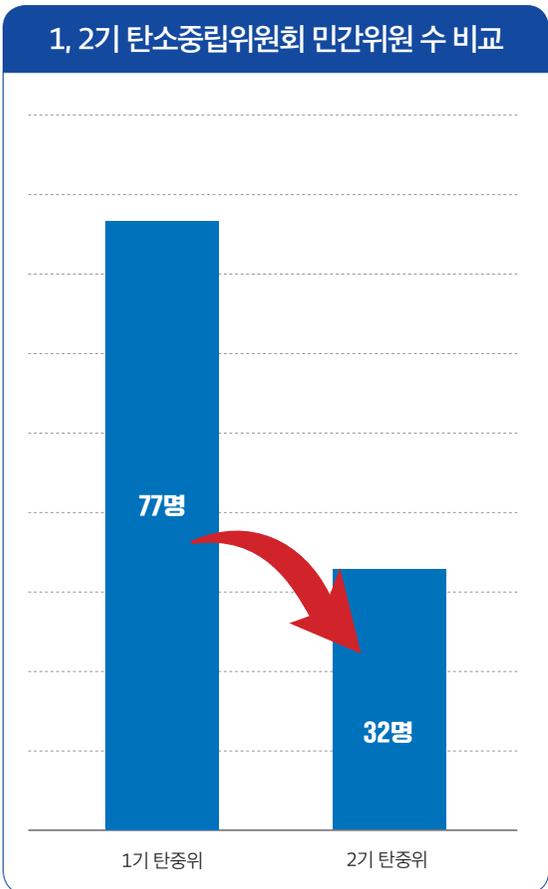
*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.

**e-나라지표,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종합하여 민주연구원 작성.

탄소중립 의지없는 윤석열 정부

환경

- 2기 탄소중립위원회, 위상과 역할 대폭 축소
 - 1기 탄중위 민간위원 77명 → 2기 탄중위 민간위원 32명으로 축소
-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사라지고 재생에너지 예산 크게 줄어
 -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예산안에 그린뉴딜 관련 언급과 내용 없음
 - 20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중 재생에너지 관련 대부분 감액
- 미래로 떠넘긴 탄소배출 감축계획
 -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평균 2%씩 감축, 2027년 이후 연간 9.3%씩 감축



*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1권) 참고하여 민주연구원에서 작성.